



감속성장, 왜 바람직한가

金 迪 敎(연구자문위원, 한양대 교수)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경제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일부에서는 비관적인 견해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경제가 이처럼 어렵게 된 원인으로는 흔히 우리 경제의 “고비용·저효율”구조를 들고 있다. 임금, 금리, 땅값은 비싼데 생산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고, 경쟁력이 없다보니 경상수지가 버티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왜 요소비용이 높고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었느냐에 있다. 우리가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고비용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는 여러가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예컨대 금리를 인위적으로 인하한다든지, 공단의 땅값을 낮추어 준다든지, 또는 고위 공무원의 급여를 동결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물론 이러한 조치들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단편적 조치만으로는 고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엄격하게 따지자면 고비용·저효율 구조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낳게 한 정책이 진짜 원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가 처음부터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가졌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의 眞因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경제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원인

우리 경제가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가지게 된 근본 원인은 지난 30여년동안 물가를 잡지 못하고 고도성장을 지속하여 온 데 있다. 임금문제만 하더라도 6.29선언 이후 정치적 민주화 과정에서 생긴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강화와 1980년대 후반 200만호 주택건설로 인한 임금파동 등이 한 몫을

한 것은 사실이나, 전체적으로는 노동의 수요가 공급을 줄곧 초과함으로써 임금의 지속적 상승은 불가피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매우 낮은 실업률을 가지고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자연실업률보다도 낮은 초과 완전고용상태에 있다. 땅값의 경우만 해도 30년 이상 인플레이가 지속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인플레이가 지속되니 땅은 투기의 대상이 되고, 개인이든 기업이든 돈있는 사람은 모두 땅을 사게 됨으로써 땅값이 오르지 않을 수 없다. 국민과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해 기술개발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지만, 기업으로서는 인플레이에 편승해서 돈을 버는 것이 훨씬 용이하므로 기술개발을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과거에는 정부가 여러 모로 기업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더욱 적었고, 기껏해야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 모방하는 데 그쳤다. 금리문제만 하더라도 인플레이 아래서는 실질금리가 낮기 때문에 기업은 가능하면 타인자본에 의존하고자 한다. 이로 인해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짐으로써 자금수요가 좀처럼 줄지 않아 금리가 쉽게 떨어질 수 없다. 물론 여기에는 관치금융으로 인한 금융산업의 낙후가 일조를 하였음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는 기본적으로 고도성장은 하였으나 물가를 잡지 못한 데서 생긴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물가를 왜 잡지 못하였는가? 여기에는 통화량의 공급이 너무 많았다던지, 중화학 공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였던지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무리하게 성장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의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보다 계속 높았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成長第一主義에 있었으며 경제안정은 1980년대초를 제외하고는 거의 무시되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대 정권마다 경제안정은 강조되었으나 업계의 저항과 정치적 이유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다. 물가안정이 있었다면 그것은 지수상의 안정이었을 뿐 국민들이 피부로는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즉,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진원은 안정이 없는 고도성장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속도를 우리의 능력에 맞게끔 낮추는 것이 선결과제다.

최근의 국내·외 경제환경

최근에 와서 정부가 다소 늦은 감이 없지는 않으나 성장은 희생하더라도 물가안정과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겠다고 한 점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정부가 인기없는 안정화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오늘의 국내·외 환경이 몇가지 측면에서 과거와는 매우 다른 데 있다.

첫째, 이미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잠재성장률은 노동력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합으로 구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전체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약 5% 내외이고, 노동력 증가율이 1.5%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6.5% 미만이다. 이는 과거의 잠재성장률 7~8%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인데 노동력증가의 감소로 인해 앞으로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는 과거와는 달리 고

도성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도성장의 지속은 즉각 물가상승과 국제수지 악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이는 현실적으로 수용될 수 없다.

둘째, 오늘날 우리의 외채문제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위험수위에 달했으며, 더욱 더 어려운 점은 경상수지적자가 가까운 시일안에 해소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경상수지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경주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멕시코사태와 같은 외환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경상수지적자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환율의 적절한 유동화가 있어야 하겠지만 이와 함께 총수요관리를 통해 정부, 기업, 가계 모두가 씹씹이를 줄이고 군살을 빼는 등 모든 경제주체가 자신의 능력과 분수에 맞는 경제행위를 하여야 한다.

셋째, 우리의 환경이 과거와 다른 점은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과거에는 수출이 잘 안되면 정부가 여러가지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수출을 지원해 주었으며 기업이 어려우면 정부가 직·간접으로 기업을 도와줄 수 있었다. 예컨대 저리금융, 조세지원, 수입 규제 등을 쓸 수 있었다. 이러한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은 수출을 증진시키고 기업의 투자활동을 자극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데 적지않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국제적 규범에 위배되는 성장촉진정책을 쓸 수 없게 되었다는 것도 감속성장의 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우리 경제는 감속성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부터 솔선수범하면서 씹씹이를 줄여야 한다. 기업도 이제는 고도성장기의 외형성장, 매출액 중심의 경영에서 내실있는 성장, 수익성 위주의 경영으로 경영전략을 바꾸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기업은 너무 안이한 경영을 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경제가 어려웠을 때 기업은 스스로 감량경영을 하고,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보다는 정치권에 압력을 가하여 경기부양책을 쓰도록 하였다. 경기부양책은 기업의 고통을 일시적으로는 줄일 수 있으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최근 경제난국의 해결을 위한 提言

지금의 경제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정부나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국민적 동참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아무리 근검절약 운동을 편다 하더라도 국민이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국제수지가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외국 상품이면 가격이나 품질을 따지지 않고 충동적으로 구매한다면 국제수지 방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민의 건전한 소비행위나 근검절약하는 자세는 경제난국을 타개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임금은 대립적, 투쟁적 노사관계 때문에 생산성 증가율을 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생산성 상승을 초과하는 임금인상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전체적으로 5~6%를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상승률도 5~6% 수준에서 안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고비용·저효율 구조는 우리가 지난 30여년 동안 인플레이를 잡지 못

한 채 고도성장을 하여 온 부작용 즉, 고도성장의 대가이기 때문에 성장을 낮춤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원화를 대폭 절하함으로써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거나, 통화량을 풀어 금리를 인하시켜야 한다든지, 임금을 동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對症療法的 조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문제의 본질에 도전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여기에는 모든 경제주체가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현재의 사태를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결코 없다. 성장률이 5~6%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기를 지나 저성장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있으며 이는 정부, 기업, 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에게 과거와는 다른 행동원리를 요구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 약력

서울대학교 경제학사(1958)

미국 밴더빌트大 경제학 석사(1961)

서독 보쿰大 경제학 박사(1970)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연구부장(1971~79)

국제경제연구원 부원장(1979~81)

한양대학교 교수(1982~현재)

국제경제학회 회장(1986)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위원(1988~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1989~92)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장(1995~현재)

세계경제연구원 후원회 가입안내

- 후원회원의 종류: 법인회원, 개인회원
- 후원회원에 대한 주요 서비스:
 - 연구원주관 행사에 우선 초청 및 참가비 할인
 - 연구원 발간 각종 간행물 및 회의자료 제공
 - 주요 행사의 비디오 및 녹음 테이프 제공
 - 법인회원을 위한 특별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 법인회원을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 개발
- 회원 가입 문의: 551-3334~7

세 계 경 제 연 구 원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

전화: 551-3334/7

Fax : 551-3339

E mail : IGENET@chollian.dacom.co.kr